

사회

광주시, 지난해 8월 '헌비동산' 시설폐쇄 권고 불구

서구청·인권위 미온 대처 화 키워

장애소녀를 8년간 철창에 격리시켜 생활하도록 하는 등 물의(광주일보 2월 2일 6면)를 빚은 장애인생활시설 '광주 헌비동산'이 이미 6개월 전 광주시로부터 폐쇄 권고를 받았으나 서구청과 인권위의 복지부동으로 사태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인 서구청이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인권위는 5개월이 지나서야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미적거렸다.

또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광주시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관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7월 1일까지 일선 구청과 공동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를 벌여 헌비동산의 장애인 학대사태를 파악했다. 광주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8월 9일 서구청에 공문을 보내 '헌비동산의 시설폐쇄'를 권고했다. 폐쇄를 권고한 이유는 '거주인 불법구금 및 지하금방(징벌방) 운영'이었다. 광주시는 자체적으로 시설폐쇄조치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장애인생활시설의 폐쇄권한이 서구청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권고를 받은 서구청은 시설 내 장애인들이 정신 및 지체장애를 지녀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인권위는 지난해 9

월6일부터 8일까지 현지 실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조사결과를 서구청에 통보한 것은 지난 1월27일로, 그 내용 역시 광주시의 실태조사와 동일했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당시 서구청에 폐쇄권고 공문을 보낸 뒤에도 몇번이나 회의를 열어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서구청이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헌비동산 내 거주권위에서 실사 후 즉각 문제점을 관할기관에 알렸다면 이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발각 즉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헌비동산과 같은 장

에인생활시설로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거주인 폭행이나 위생 불량, 횡령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광산구 B, S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한 상태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당시 서구청에 폐쇄권고 공문을 보낸 뒤에도 몇번이나 회의를 열어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며 "하지만 서구청이 인권위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더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헌비동산 내 거주권위에서 실사 후 즉각 문제점을 관할기관에 알렸다면 이들 장애인들의 인권침해는 발각 즉시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시는 헌비동산과 같은 장

선재성 판사 2심서 유죄

기업 관리인에 변호사 알선 벌금 300만원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익 실현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지 않았던 만큼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장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증거고·대학 동창이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최초피고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거두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원침 (8494) 김장동



보해저축 비리 이철우 전 함양군수 법정구속

징역1년 벌금 2천만원

광주지법 형사 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리조트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철우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뤄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경남 함양군에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갖춘 리조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 박모씨에게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수

십여원을 대출받는 등 사업비 대부분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P) 대출에 의존했지만 사업은 중단됐다. 이 전 군수는 별도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에서 낙마했다.

그러나 박씨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천사령 전 함양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박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화저축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결식아동 대보름 장보기
코레일사회봉사단이 후원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 회원들이 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정월 대보름(6일)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사가 후원하고 있는 가족들과 명품·호두 등 부럼을 구입하고 있다. 이 행사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총인비리 대립산업 상무 구속

광주지검, 공무원·교수 등 심사위원 사법처리 주목

초등학생 자매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3년간 신상정보공개가 선고됐다. 그러나 피해가족과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 부장판사)는 2일 초등생 자매를 성추행해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윤모(6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신상정보공개형을 내렸다. 윤씨는 2001년 당시 이곳에 사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5학년이 될 때까지, 또 2008년부터는 초등 6학년인 동생을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할 때까지 한약방 원장실 등에서 매달 수십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0년에 전자발찌형을 구형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1000억원대 광주 총인저감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 간부가 뇌물공여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검찰 수사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 참여한 광주시 공무원과 민간 심사위원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지난주 대립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후인 지난달 29일 입찰 등 업무 전반을 추진한 대립산업 상무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대립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며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대립산업 컨소시엄, 금호 컨소시엄, 현대 컨소시엄 등이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경쟁을 벌일 당시 광주시청 내에서 관련 공무원들을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시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 9명과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 6명 등 모두 15명 중 일부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향후 이들 심사위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광주시의 입찰 비리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광주시는 관련 부서 직원과 심사위원 몇 명이 어느 정도 금품을 받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광주시의 지난해 발주된 공사 중 최대 규모의 공사 입찰에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광주시의 입찰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윤 상무의 구속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업체라는 점에서 금품을 건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이며,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 982억원의 광주시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총인 방류 허용치를 ㎏ 당 2mg에서 0.3mg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로 지난해 터키(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대립산업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 선정됐다.

이후 광주시가 특정업체에 좋은 점수를 준 설계심사 분과위원 7명(공무원 5명 포함)을 전격 해촉했고, 광주시 시민단체인 참여자 21이 입찰 심사에 참여한 시청 공무원과 대립산업 관계자 등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황일봉 전 남구청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환 부장판사)는 2일 공무원 승진·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55) 전 광주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채용 알선 브로커 박모(6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의 승진 대가로 돈을 준 배모(여·57)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 전 구청장은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에 남구청 공무원 채용 청탁과 함께 브로커 박씨가 받은 7000만원 가운데 3300만원을 종교·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구청장은 이와 별도로 서기관 승진 사례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씨는 7000만원 중 나머지를 횡령 혐의로, 배씨는 남편의 승진 사례금을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부킹된 집단 성폭행 30대 3명 소고량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김모(31)씨 등 30대 3명이 경찰서 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명 '부킹'으로 알게 된 A(여·20)씨가 만취하자 모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 A씨를 먼저 성폭행한 뒤 집에 있던 친구들까지 불러 못된 짓을 저지른 것.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CHANNEL 광주일보 채널A 뉴스 동영상 제보 받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촬영한 영상이 가장 생생한 뉴스가 됩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영상, 사건·사고 사회 곳곳의 개선해야 할 점들을 촬영하여 제보해 주십시오. 촬영한 영상은 광주일보 채널A 뉴스 자료로 활용되며 채택된 영상에 대해서는 소정의 채택료를 드립니다.

보내실곳은 광주일보사 편집국 여론매체부 전화 062-220-0639, 이메일 job0000@hanmail.net 입니다.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ng.co.kr 개강:3월2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